



# 여성정책동향

- 여성정책동향(2009년 2/4분기)  
최 윤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팀)
- 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여성과 발전” 국제포럼 개최  
편 집 부

## 여성정책동향 (2009년 2/4분기)

최 윤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팀

### 증가하는 여성 실업과 대책들

갑작스런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말부터 대규모의 예산에 막대한 추경예산까지 풀어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내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 효과나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심각한 고용불안과 약간의 회복세

최근 3개월 동안의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3~4월경 최고의 고용 불안 위기가 있었다가 미진하게나마 조금씩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2,311만 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에 비해 19.5명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감소폭은 지난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9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었다. 또한 실업자는 95만 2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7.6% 증가하였고, 특히 고졸 실업자의 비율은 전년 동월에 비해 20.9% 증가해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임금근로자 수도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1999년 6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4월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4천억원을 넘어 월 단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달의 8.7%, 전년 동월의 63.2%가 증가한 수준이다. 보통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3개월에서 8개월임을 고려할 때, 작년 말부터 누적된 실업인구가 상당함을 볼 수 있다. 다행히 5월부터는 실업급여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8.5%)로 전환되었고,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미진하게나마 호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 경기침체의 직접적 피해자, 여성

경기침체의 여파는 여성 취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취업자 수는 월평균 15만7000명 감소했는데, 이 중에 여성 취업자 수는 월평균 13만7000명 줄어 평

균 감소인원의 87.3%를 차지했다. 즉, 여성 취업자 수 감소폭은 남성(2만)에 비해 약7배 많은 규모인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여성 취업자 수는 97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4000명 줄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2003년 4월 : -20만5000명), 4월 한 달 동안 줄어든 일자리의 92.6%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맞물려서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여성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에 32만6000명 늘어 2003년 4월(36만 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급증하는 실업의 위험에 대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가사·육아 등을 선택하는 여성이 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업 공포가 가장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는 30~40대 남성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가장의 실직으로 인해 생계를 떠맡는 여성들 또한 급증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여성 취업자가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데 이어 3월에는 30~40대 남성 취업자가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작년 가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불황 전에 비해 38% 정도 높아졌으며, 이들 구직 여성들은 주로 '영업·판매·영업관리' 나 '생산·공정관리' 등의 업종을 선호하는 30대 이상이 기혼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으로 남편의 실직이나 소득감소는 물론 자녀들이 크면서 늘어나는 생활비와 교육비 등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기혼여성들을 생계 전선으로 뛰어들게 하는 것이다.

##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들

늘어나는 여성 실업율에 대비하여 여성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부는 지난 4월말까지 각 지역의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취업 상담한 건수는 총 4만 1021건, 이 중에 9,269명이 취업·창업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에서부터 새로 추진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다. 4월 말까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상담건수는 2만3,816건이었으며, 2,030명이 정규직 취업, 2,191명이 비정규직 취업, 98명이 창업에 성공하였다.

각 지자체에서도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집에서 가까운 기업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지역일꾼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눈 후, 각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이를 전업주부에게 제공하고, 알선을 통해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9월까지 총 1,600여명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900여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구인기업체에서 인턴으로 6개월 간 일한 후, 실제 취업으로 연계하는 주부 인턴십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경기도는 경력단절여성 직업상담 및 직업훈련 등 여성인적자원개발에 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새일센터나 여성회관 등을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특화된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4천여명의 여성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컨텐츠과정을 개설하

여 여성들 스스로 경력을 설계·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충청남도는 93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보육시설 보충교사 1,323명을 뽑아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보육시설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 정부와 지자체,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 제시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

우리나라는 작년기준 출산율이 1.19명으로 2016년부터 생산인구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 정부재정수지 위기 등이 예상되고 있는 저출산 위험 국가이다. 이 같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에 대비해 종교계와 경제계, 시민사회계, 언론계, 정부가 함께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출범하였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그야말로 범국민 출산장려운동인 셈이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고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는 한편 불임 가구의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한 종교계는 낙태 방지 등 생명존중운동, 육아 지원시설 확대, 결혼예비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시민사회계는 공부방 확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경제계는 주40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 자자체들의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

저출산이 국가적인 위기로 떠오르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출산율 0.78명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시 강남구는 160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해 출산, 보육, 교육 등 3개 부문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방과 후 학교 운영시간 확대, 지역 내 예비부부에게 2000만원의 결혼자금을 융자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2천558억원을 투입해 임신·출산·보육 3단계의 체계적인 저출산 종합대책인 '아이 러브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임신 단계에서는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13억원으로 확대하고, 임신부에게는 철분제 및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한다. 출산 단계에서는 기존의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이에서 둘째 아이로 조정하였으며, 보육단계에서는 보육료를 대폭 확대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 동대문구는 자치단체 최초로 육아휴직 대상 여성공무원의 온라인 재택근무제를 6월부터 실시하였다. 온라인 재택근무는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

지하면서 주 1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보수도 전액 지급되며 초과근무수당 등 일부 수당도 지급하게 된다. 특히 동대문구는 이들의 재택근무를 위해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내 전산망을 새로 정비하는 노력을 보여 향후 여러 자치단체에도 귀감이 될 전망이다.

### 정책 많다고 효과 좋나?

이처럼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고려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교육정책 및 고용불안 등의 사회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주저한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보육과 사교육비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은 부부들이 사교육비를 비롯한 양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들에게는 출산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부담이 있어 단편적인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현 정부의 저출산 지원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이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위원회로 격하하는 등 과거에 비해 계속 퇴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이번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종전보다 적극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는 이상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벗지 못할 수도 있다.

### 여성부의「G-Korea」운동 추진

이번 분기 여성부 핵심적인 정책 이슈는 아마도 「G-Korea 여성협의회」와 「We Green」일 것이다. 여성부는 경제위기로 위축된 사회분위기를 전환하고 녹색 생활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여성단체 등 여성계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하여 「G-Korea 여성협의회」를 본격 추진하였다. 「G-Korea 여성협의회」는 여성경제인연합회, 새마을부녀회 등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경제단체 600여개로 구성되었으며, 활동분야별로 일자리 창출(Getting Job), 녹색생활(Green Life), 희망 나눔(Giving Hope) 분과로 나누어진다. 또한 「G-Korea 여성협의회」 구성단체의 회원에 더하여 아파트 부녀회, 학교 학부모회까지 묶어서 G-Korea 실천단인 「We Green」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We Green」은 지역별 활동을 조사·관리하고 성과측정을 담당하는 약100명의 「We Green 매니저」와 실질적으로 실천과제를 실행하고, 홍보하는 약10만 명의 「We Green 서포터즈」로 구분되어 활동한다. 여성부는 「G-Korea 여성협의회」와 「We Green」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였고, 지역별 결의대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하였다.

그러나 전국의 600여개 여성단체가 동원되는 여성부의 「G-Korea」정책에 대해 과연 여성부의 역할에 걸맞은 정책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We Green」은 친환경 제품 구입이나 물 아껴 쓰기



같은 생활실천적인 캠페인적인 성향이 짙은데, 이러한 운동은 자발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시민단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나아가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정부가 주도해 관변 협의기구를 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 여성부가 민간단체를 정부의 녹색성장에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여성부는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이 정책의 성인지적 예산 편성 등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시민단체들과 여성·환경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좀 더 탄력성 있는 정책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경찰의 성매매 집중 단속 실시, 성과와 한계

경찰이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매매업소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불법 안마시술소, 유사성행위업소 등은 물론 여성 피해자를 감금해 놓고 인터넷 성매매를 강요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사범을 검거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신·변종 업소의 유사 성행위 알선이 포착이 되었는데, 건물 내에 대형 유리 ‘쇼케이스’를 만들고 윤락여성을 고르게 하는 업소, 립살롱 ‘모텔 연계식’의 대규모 기업형 업소,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스포츠마사지 업소, 심지어는 종업원끼리의 성관계 시범을 보인 안마업소 등이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은 착수 1주일 만에 전국적으로 1,477명의 성매매사범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보였다. 실제로 강남의 성매매 단속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단속 중간에는 실적이 떨어질 정도로 성매매가 줄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단속 종료 후에도 성매매가 계속 위축될지는 미지수다. 대형 업소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고, 여종업원들 역시 업주에게서 받은 선불금을 갚기 위해 업소 출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속적인 성매매 단속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성매매 전담팀’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는 현재 성매매 단속을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계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여 큰 성과를 얻기 힘들 뿐 아니라 성매매 단속 기간엔 나머지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속된 성매매 업소들이 재운영하는 사례도 빈번하므로 단속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속 조치를 취해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동시에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들이 다시 업소에 유입되지 않도록 상담 등 구제의 길을 열어 재유입을 막는 사후 조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등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 확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보다 확대되었다. 여성부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여성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을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임대주택 분양

시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대 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게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 '선정 심사위원회'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부는 자립·자활 의지가 높은 폭력피해여성을 대상으로 '그룹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룹홈은 임대기간 2년이며, 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임대보증금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상황이 비슷한 가구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서로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을 시도하는 여성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에 20호 임대주택을 시범 실시한데 이어 올해부터 인천, 강원, 충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인천시는 최근에 인천지역 내 빌라 1개채(10가구)를 마련하여 올해 그룹홈 추가 대상 지역 중에서 가장 먼저 입주를 마쳤다.

그러나 주거지원사업이 '보호'보다 '자립'에 무게중심을 뒀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한층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분노출을 우려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여성이 많고, 심지어 전남편이 찾아올까봐 전입신고도 못하는 피해여성이 많다는 것이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급자, 차상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피해여성에게 아이가 있을 경우 교육비, 의료비 등도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거지원과 더불어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여성과 발전” 국제포럼 개최

편 집 부

## 회의개최 개요

### 1. 배경 및 목적

- 아시아지역 여성 전문가들의 한-아세안 여성연구 촉진 및 성과 공유
- 한-아세안 사회 문화와 여성들의 자원과 삶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 한-아세안 민간 여성연구 교류협력 강화
- 미래 아시아 여성 정책의 수립과 활동에 기여할 민간 네트워크 활용

### 2. 공동주최 기관

아시아여성학회(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 3. 후원 기관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 and Trade)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한국여성학회(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아시아여성학센터(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 4. 주제

"Thinking Alternatives, Sustainable Future for Women in Korea-ASEAN"



## 5.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9. 5. 28(목) 13:00 ~ 18:0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2층)

## 6. 참가자

- 주제 발표 5명  
캐롤린 소브리치아 교수(필리핀 국립대학교)  
크리스티 포완다리 교수(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인탄 오스만 교수(말레이시아 새인스 대학교)  
김경희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김이선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연구실)
- 토론  
허라금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조주현 교수(계명대학교)  
김은실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장필화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임은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 일반청중  
아시아여성학회 회원 등 약 80명

## 7. 기대효과

-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
- 여성 전문가 민간 학술 네트워크 확대로 한-아세안 관계 협력과 교류 증진
- 각국 여성 정책 상호 이해 및 한국의 여성 정책 리더십 활용
- 국내외 아세안 여성 연구 기반 조성 및 활성화

## 8. 일정

〈그림 1〉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13:00 ~ 13:20	등 록
13:20 ~ 13:35	<p>개회식 사 회 : 공미혜 교수(신라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 장필화 아시아여성학회장</li> <li>• 환영사 :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li> <li>• 축 사 : 신낙균 국회여성위원회 위원장, 오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li> </ul>
13:35 ~ 14:00	<p>기 조 연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r-Asia 페미니스트 지식교류 경험나누기 캐롤린 소브리치아 교수(필리핀 국립대학교)</li> </ul>
14:00 ~ 14:15	휴 식
14:15 ~ 16:00	<p>패 널 발 표 사회 : 윤형숙 교수(목포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성별영향평가의 과제와 미래 김경희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li> <li>• 인도네시아의 재난 및 위기관리에서의 여성과 젠더 이슈 크리스티 포완다리 교수(국립인도네시아 대학교)</li> <li>• 말레이시아의 '젠더와 발전' 을 돌아보기 인탄 오스만 교수(말레이시아 새인스대학교)</li> <li>• 국경을 넘는 여성, 국경 안의 시민권 : 한-아세안 협력의 출발점을 찾아서 김이선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연구실)</li> </ul> <p>토 론 허라금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조주현 교수(계명대학교)</p>
16:00 ~ 16:15	휴 식
16:15 ~ 18:00	<p>종 합 토 론 사회 : 김은실 교수(이화여자대학교)</p> <p>패 널 장필화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캐롤린 소브리치 교수(필리핀국립대학교) 인탄오스만 교수(말레이시아새인스대학교) 크리스티 포완다리 교수(국립인도네시아 대학교) 임은미 교수(이화여자대학교)</p>
18:00	폐 회

## 환 영 사 요 지(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아시아 여성학회와 공동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여성과 발전’ 국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하며, 동 포럼이 개최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외교통상부, 여성부, 한국여성학회, 아시아여성학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시아여성학회 회장, 국회여성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아세안지역의 여성전문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해외에서 오신 여성 전문가들, 국내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함.
- 한·아세안 국가 간의 정치, 문화적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역여성들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 또한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 지역 여성의 지위현황에 대해서 상호 이해와 교류증대를 위하여 이 지역의 여성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성 발전 의제를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그간 우리나라 여성정책 기반을 다지는데 일조함과 동시에 전 세계 다양한 부문의 여성정책 전문가와 협력함으로써, 정부가 갖춰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해 옴. 그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성 평등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ODA의 성 주류화 방안 연구, 개발도상국의 여성문제와 정책동향 파악, 협력 파트너십 증진 방안 연구 등을 진행함.  
이와 함께 아세안지역 국가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여성정책성과 확산 및 관련국가 전문가들과의 협력네트워크를 다져옴.
- 동 국제포럼이 한·아세안 지역 여성 의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를 여성주의 시각에서 되돌아보고,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특별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함. 더불어 한·아세안 지역 여성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다시 한 번 동 포럼의 공동개최 위해 애써주신 아시아여성학회 회장, 후원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및 본원 대외협력팀장 외 관계자 그리고 동 국제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 내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함.

## 기조연설

### • Inter-Asia 페미니스트 지식교류 경험나누기

(캐롤린 소브리치아 필리핀 국립대학교 교수)

- 여성발전은 다양한 분야의 성별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우월주의, 개발주의 모델에 대해 예측하기도 함. 또한 기초적 접근법의 이용 등을 통해 여성 및 남성에게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지역사회 인프라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옴.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국적, 민족성 등이 어떻게 정치적 발전과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해 옴. 초점을 맞춘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과학 분야에서 성 평등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젠더 관련 이슈의 전 세계적인 정치적 영향력, 남녀 간 명확한 삶의 차이, 개발에 관한 남녀의 상황 차이, 오랜 시간에 걸친 차이로 인한 사회의 영향력 등임.
- 1998년 2회에 걸쳐 서울에서 아시아 지역 내 여성학자들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 개최됨. 이 워크숍의 역사적 성과는 가족, 노동 및 섹슈얼리티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였음. 2000년 서울에서 개최된 포럼에서는 8개국 학자들이 모여 경험을 발표함. 각 국가의 여성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회 등에서 기후변화, 세계화, 가족구조변화, HIV/AIDS 등을 살펴봄. 2003년 유네스코 방콕회의에는 15개국이 참여하여 아시아 젠더 네트워크를 구축함. 올해 2월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도 여성학자들 간에 많은 논의를 거듭하여 또 하나의 학술 대화의 장을 마련함.
- 2007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많은 젠더 관련 기관 설립하여 여러 관련 연구 진행함. 그 이후로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의 역할, 가정폭력과 같은 주제에 관한 많은 교육훈련 활동을 진행함. 젠더 관련 기관을 통해 아이디어 및 경험을 공유하고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 간 교류 및 여성관련 저널이 소개됨. 특히 이화여대, 숙명여대 저널 및 필리핀 대학의 여성학 지식연구 경험 프로그램은 학생 간 교류 및 강의자료 교환으로 이어짐.
- 대부분의 국가들이 행동계획 이행을 위해 정치 분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음. 기술지원, 여성 폭력 대처를 위한 성 주류화정책 마련, 인권침해 방지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국가 간 교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함. 필리핀에서도 여러 단체와의 방문 교류를 통해 여성관련 발전에 대해 논의함. 그 결과, 여성입지 향상을 위한 성과가 있었으며 연구, 활동, 가르침으로 여성 인권 촉진에 기여함.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음.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성 이데올로기가 세계적 금융위기와 함께 재등장하여 여성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분야를 이해하고 해결해야 할 것임.

- 여성학자 및 사회운동가들은 공통적이면서도 다양한 이해, 위치, 맥락과 관점을 따라, 독창적이며 열정적인 협상을 취하면서 지역에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젠더이슈의 도전에 맞서 옴. 또한 문화적 신념과 관행, 사회조직과 최근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와 과정이, 여성에 대한 편견의 재생산에 함의가 되었는지를 검토함. 이들은 문제 제기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 중심의 방법을 찾는 데 있어, 협력연구 및 발간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강의, 옹호활동,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참여도 해 옴.
- 결론적으로 여성학자, 운동가 및 개발 종사자들은 그들의 이니셔티브를 개인적 및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그 방식에 있어서의 발전과정을 조명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남아있는 기회와 장애를 규명하고, 아시아의 여성학, 향후실천방향 및 영향 평가 등을 실행해야 할 것임.

## 패 널 발 표

### • 한국 성별영향평가의 과제와 미래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 국내에서는 성별영향평가가 성인지 예산, 성별 통계와 함께 운영되고 있음. 한국의 성 주류화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실행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한국 성 주류화의 세 가지 방법은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성별통계가 있음.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이 법적으로 실행될 예정이고 2009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서를 각 부처가 작성해야 함.
- 한국은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신설하고 2004년에는 시범 적용함. 2005년 광역자치단체를 시작으로 2006년 기초지자체, 2008년에는 총 294개 정부기관이 1524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함.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급증함. 광역자치단체 16개 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기초 자치단체 234개 중 9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부산시의 경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는 2004년 조례 개정을 통해 성별 영향평가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음.
- 성별영향평가의 적용대상을 광역 및 기초지자체 뿐 아니라 소속기관, 투자 기관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음.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8년 대전을 마지막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함.
-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수와 과제수의 변화에 관한 여성부 제공 자료를 보면, 참여기간과 대상사업이 양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줌. 2004년에는 10개 시범과제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졌으나, 2008

년에는 295개 기관의 1531개 과제에서 이뤄지고 있음. 여성부가 제시하는 과제 선정 기준은 정책수혜도가 성별 격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 예산 규모가 크고 국민적 관심사항이 되는 정책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이미 성 평등을 위한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제외함.

- 대상 과제의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음. 예산이 100억 이상인 과제는 중앙 행정기관 21.8%, 광역자치단체 7.2%, 기초 자치 단체 2.2%에 불과 하며, 주로 예산규모가 작은 사업에만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음. 아직까지 성 평등은 우선시되기 보다는 후순위 즉 주변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중요과제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는 활발하지 않음. 내용면에서도 보육, 복지 부문에서는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용, 교육, 건설, 교통 등 주요부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 최근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설, 교통, 도시계획이 증가하고 있음. 김포시 도시계획에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등 유럽국가의 경우처럼 도시 리모델링 시 성 주류화를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러한 추진체계는 여성부가 주관하는데, 기초지자체가 평가 보고서를 광역지자체에 전달하고 광역지자체가 보고서를 여성부에 재 전달하는 방식임. 하지만 평가 추진의 어려움 및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공무원이 하루에 3-4시간 교육으로 젠더 문제를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 평가의 결과 및 정책개선의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함. 농림부의 사례임. 농업 인력 육성정책에는 남성이 농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 및 정부지원을 남성이 우선적으로 받게 되어, 정책 수혜자는 대부분이 남성임.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여성농민을 교육생의 30%로 할당하는 등의 조치 및 관련 위원회에 여성비율 높이기 등의 제도 개선 제안을 한 바 있음. 전라북도의 사례임.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대부분의 직업이 남성위주로 구성되어 여성 노인의 일자리 참여가 어려웠음. 그래서 여성 일자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놓음.
- 마지막으로 한국 성별영향평가의 5년간 성과와 함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함. 지금까지의 성별영향평가의 성과는, 성 주류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일반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성별 감수성 높였다는 것임. 또한 성별 현황 파악을 위한 성별 통계의 생산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평가의 결과로 제도개선을 위한 각 기관의 법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였음.
-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성 주류화의 세 가지 실천 전략임.

#### 1) 여성의 주류화



- 2) 성 평등 관점의 주류화 : 미흡한 면이 있음. 예를 들어, 모자 가정 보다는 모 부자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야한다고 하지만, 성 차별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침. 젠더 관점의 충분한 해석이 주류화 속에 들어가지 못함. 이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문제 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3) 주류의 전환 : 차별적인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함. 동등기회 접근, 적극적 조치, 성 주류화가 받쳐 주는 방식으로의 성 주류화가 이뤄져야 함.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는 어려움.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제도로 접근하면, 남성을 위한 제도로 치우침. 성차별적인 구조, 성차별적 문화 속에서 젠더 권력 관계가 희석될 때 본래의 의도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우려가 있음. 성 주류화는 호주사회처럼, 공무원, 전문가, NGO 이 3자가 곤고하게 결합되어야 전환적 성격의 성 주류화방향으로 갈 것임.

- 결론적으로 성별영향평가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표피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심층적, 사회 구조적인 접근을 통한 분석으로 명료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 이를 통해 성 주류화가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성 평등이 작업장과 조직 문화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전환성을 실천해야함. 이러한 실천은 성별 영향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병행되어야 할 것임.

### • 여성과 재난: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크리스티 포완다리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교수)

- 인도네시아 인들은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지 몰랐었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 신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사후대처가 늦음. 자카르타의 주변지역인 세뚜긴퐁의 사례임. 네덜란드에서 건설한 건물들이 모두 무너졌음에도 재난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 서류상에는 국가 조율기관이 있었으나, 쓰나미가 덮친 후에야 정책 및 재난 전후의 지침 마련 등의 활동을 시작함.
- 인도네시아는 젠더와 관련한 포괄적인 자료가 없음. 4년 전 자료를 써야 할 만큼 최신 자료를 얻기가 어렵고, 성별 분리된 자료를 얻기도 어려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아동도 마찬가지임. 파푸아 뉴기니 등의 지역에서는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위험이 상당히 높음. 이는 문화적, 사회적 특성도 기여함. 예를 들어, 아체(Aceh)의 쓰나미 이후 여성이 토지 및 땅 문서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여성의 땅 상속권을 되돌려 주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
- 인도네시아 재난 관리법은 재난에 개입하기 위한 법으로 새로운 관점을 주고 있음. 사전 대처, 사후 응급 조치 및 관리까지 적용하고 있음. 재해 대비의 접근 방법으로 BNPB 등 재난 관리 국가 기구를 설립함.

정부입장에서 사전 대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 것임. 하지만 반응과 대처는 여전히 느림.

- 정부의 중의성 평가 및 결과 발표에 따르면, 각 지역별 현지 준비상황에서 예산 등이 너무 부족함. 이 법안이 잘 이행된다 하더라도 젠더 이슈, 여성의 니즈를 다루는 데는 부족함이 많음. 정의, 평등, 비차별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임. 이 세 가지만 보장되면 평등이라고 얘기함. 그러나 여성이 관심 있는 재생산 등의 이슈는 배제됨. 이전에는 젠더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지금보다 쉬웠는데 현재는 정치적 마찰, 상충되는 상황, 많은 정보 단체의 개입 등을 이유로 여성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더 어려움.
-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위치가 자연재해에 더 취약하도록 만들고 있지만, 여성은 변화와 필요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여성의 역할은 농촌 생활경제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관찰되고 있음. 2006년 5월 자바섬(Java Island)에서 일어난 지진 후, 여성들이 외부의 지원 없이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매우 노력함. 아체(Aceh)는 엄청난 자금지원을 외부에서 받았으나, 이 지역은 주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최종 발언권을 갖겠다고 명시함. 여성들은 임시 수용소, 급식소 등에서 스스로 자청하여 일을 진행하였고, 일부 NGO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음. 이 지역의 사례는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음.
- 2008년에는 아체(Aceh)와 자유를 도모하는 단체 간 MOU가 체결되어 여성들의 권리 및 젠더 관련 평등성 보장을 약속함. 또한 성 평등과 관련된 조치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히 토지 분배 시 여성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함. 아체(Aceh)의 도전과제는 문화와 종교적인 문제가 될 것임. 이전에 여성들은 문제를 회피하였고, 젠더와 관련된 개념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생각했었음. 그러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의 표현 방법으로 조금씩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
- 풀리재단(PULIH Foundation)은 커뮤니티의 심리사회적 임파워먼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인도네시아의 비 정부기관임. 쓰나미 이후, 시민사회의 재건을 위해 힘쓴 단체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모든 심리사회 및 문화적 접근을 반영함. 함께 협력하여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소유 및 명예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심리사회적인 임파워먼트를 구축함. 또한 가족 및 사회에서 남녀의 평등을 위해 노력함. 남성들의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있음. 또한 간접적으로 여성들의 경제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이행사항은 젠더 관점을 중심으로 다뤄짐. 중요한 것은 성 평등과 정의가 재난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임. 여성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주의와 보호

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젠더와 발전’ 을 돌아보기 :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인탄 오스만 말레이시아 세인스대학교 교수)

- 2009년 현재, 말레이시아는 세계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받은 상태로 이는 말레이시아가 금융 분야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임. 이를 계기로 젠더발전이 경기 회복에 있어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발전에 대한적인 개념을 포함하여 돌아보기로 함.
- 예전에는 개발의 개념이, 여성을 고용하여 생산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개념을 대체하여 추가적인 개념이 나와야 함. 1990년대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호황이었고 많은 투자에 힘입어 4대 총리는 비전 2020 내놓음. 비전 2020은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가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획임. 모든 자원이 이를 대비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 자원에는 남녀의 인적자원이 포함되어 있음.
- 말레이시아의 90년대 평균 성장률은 8.8%였음. 그 당시에는 단순한 물질적 발전만을 추구했었음. 그러나 비전 2020은 사회, 심리, 문화의 포괄적인 발전을 의미하며 웰빙 사회 추구, 권익이 옹호 받고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것임.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사회의 융합을 강화시키는 것임. 말레이시아에는 3가지 인종이 공존하고 있는데 현재 6대 총리는 통합된 말레이시아를 구상하고 있고 각기 다른 말레이시아 국민이 아닌 국가 전체를 봐야한다고 주장함.
- 비전 2020은 사회적 정의를 도입하고, 통합적 사회를 문화적 환경에서 만들자 라는 구상임. 각기 다른 인종이 서로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타 민족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라는 문제가 관건임.
- 남녀의 권력관계와 양성관계에 대해 생각해 봄. 즉, 단순히 여성의 노동력을 참여시키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는 것임. 말레이시아의 15-24세의 노동인구가 전체 노동인구의 63.6%를 차지하고 있음. 이 연령대의 여성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고령인구는 상승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인구가 상승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고령 여성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고령 여성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함.
- 새천년발전계획에서는 보편적인 초등교육을 실현함에 있어 성과가 있었음. 하지만 여학생은 여전히 기초 과학이나 공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태임.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학생이 충분한 과학자나 기술

전문가 도움을 받기를 원함. 말레이시아 대학의 여성 비율이 70%를 육박하고 있으나, 경제 활동 참가율은 40%로 여성의 교육이 직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 보건 분야에서는 말레이시아의 기초보건 분야가 긍정적으로 진행 중임. 그러나 HIV/AIDS 감염에 있어,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비율 높아지고 있음. 이로 인해, MDG 목표 달성에 의문을 가지게 됨. 여성 취업률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고 특히 직종별 취업률은 차이가 남. 사무직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높으나, 급여 등의 처우는 상당히 미흡하므로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별에 의한 자영업자의 수, 고용 및 비고용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음.
- 젠더와 발전에 관한 논의는 양성관계,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 연령 종교가 다 얹혀 있으므로 복잡함. 따라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매우 중요함. 여성이 정치권력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여성이 발전의 틀에서 어떤 성별 격차가 있는지, 또 어떻게 분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 말레이시아의 경우, 제9차 말레이시아 국가계획에서 여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됨. 보다 많은 여성의 참여, 훈련 기회 확산 등 국제적 수준의 양성 평등 의제가 논의됨. 그러나 성을 인지하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지가 의문시 됨. 성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성의 권익보고가 발전과 연관되어 있지 않음. 이는 여성이 발전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함.
- 이주 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나 소녀들로, 비정규직에 포함되어 차별받고 있음. 또한 전반적으로 사회는 성희롱에 관심 없음. 여성은 주로 저소득 업종에 종사, 고소득 직종이라도 임금이 낮음. 남성이 돌봄 경제에 포함 되어있지 않고 여성만이 참여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현실과 계획 간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제9차 말레이시아의 국가 계획에서는 발전 부분에서 여성을 활용하고 있음. NGO 및 여성학자들이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정치 분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음. 보다 많은 분야에서 보다 많은 연구 활동이 이루어 질 것을 희망함.

#### • 국경을 넘는 여성, 국경 안의 시민권 : 한·아세안 협력의 출발점을 찾아서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동남아 3개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목적국은 변화하고 있는데, 1997년부터 이주노동자의 목적지는 아시아 지역이 중동지역을 능가하기 시작함. 주요 송출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송출 및 유입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유입국은 브루나이, 대만,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임. 동아시아 국가들이 1990년대 이후로 이주에 있어 취약점이 많은 것은 사실임. 수적인 증가 및 제도적 허점으로 개개인의 위험과 고통이 늘어나고 있음.

- 동남아시아 전체 이주자 중 남성대비 여성 비율은 증가 추세임. 송출국 및 목적지 국가 모두 여성의 비율이 늘어남. 한국의 경우 1995년~2007년 성별 외국인 국내입국자 증가율은 여성은 165.6%, 남성은 53% 증가해 여성 입국자가 남성 입국자 증가율의 3배를 넘음. 여성 이주의 통로가 굉장히 좁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율이 증가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음. 대부분의 여성은 성산업이나 돌봄서비스 즉 가사노동, 간호(보조)사등으로 취업하고 있음.
- 결혼이주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동남아 국가의 국제결혼 증가세는 놀라울 정도임. 이것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 하에서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음. 한국, 대만, 일본 등 경제 개발 수준이 높은 남성 중 소외계층의 남성들과 동남아 출신의 동아시아 개도국의 빈곤계층 여성 간의 결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하면, “일반 여성보다는 낫다.” 라는 평가도 있으나, 가족 관계로 이주했음에도 단신 이주자와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경우가 흔함. 남편가족의 종속적인 구조에 편입되어 완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움. 외국인 며느리에게 한국 전통의 가족문화를 지키라는 어려운 요구를 하기도 함. 최악의 경우 인신매매, 인권침해 등의 일도 일어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동남아 출신 결혼 이주여성이 지니는 공식적 위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국적 취득에 관한 것임.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의 주요 목적지 국가는 초-국가적 이주가 일상화한 세계 속에서도 국적에 관한 전형적인 차별/배제 모형을 유지하고 있음. 제한된 기간 동안 체류가 허용되는 이주노동자와 비교하면 결혼 이주자들은 안정적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고 국적 취득의 가능성은 높음. 그러나 한국 국적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은 30% 정도에 불과함.
- 국가별 국적 취득의사 및 국적 취득률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음. 국적 및 영주권 취득 의사와 비교해보면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이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으나 이 가운데 제한된 인원만이 실제 국적이자 영주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국적 취득 의사와 실제 취득률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았음. 이는 한국 사회와의 공식적 관계를 국적 보다는 영주권 통해 확보하려는 경향임. 일본 제외한 국가 출신자 특히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출신자의 경우, 국적 취득에 대한 요구와 현실의 차이가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남.



-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여성은, 한국 내 거주기간이라는 기본적 요건을 갖추어도 국적 취득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생계유지 가능한 수준의 경제력, 남편이나 시부모의 실질적 동의 등의 요건 때문에 취득하기가 쉽지 않음.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가족관계가 국적취득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 주체로서의 권한은 물론,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한 확보에 있어 한계에 직면함. 결혼이주여성들 중에는 자신의 의도나 노력과 무관하게 불법체류자화 되어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송환의 위협으로 인해 착취나 폭력 등의 인권 침해적 상황에 직면해도 각종 지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권리 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각종 권리를 확보하고 국가와의 공식적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인의 부인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음.
- 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의 지점, 위치의 특수성을 ‘가족 내의 앤클레이브’ 로 봄. 즉, 가족 외부에서 자신의 기대와 요구를 뒷받침할 만한 지지기반 형성 가능성에 제약이 있다는 것임.
- 결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 이면의 부정적 편견은 이들의 결혼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현실을 함께 살아가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한국의 불균형한 젠더구조, 불균형하고 경직된 성별 구조 및 기존 질서 속에 결혼이주 여성을 주력시키려는 정책의 문제임. 송출지와 목적지의 위치에 있는 한국과 아세안이 기존 질서와 변화하는 지역 환경의 모순 속에서 이주여성이 직면한 각종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지역 공동체를 모색하는 지역 차원의 실천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것임.



▲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환영사



▲ 패널 토의